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마을’에서 ‘마을들’로

을로'라는 책의 저자는 이른바 '디지털 매체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양식이라는 측면에서 '마을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가 보는 '마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갖는 특징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입말 언어문화, ②사람이 곧 미디어, ③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미분화, ④사생활의 부재, ⑤빠른 정보 유통 속도 및 곁잡한 정보 공유, ⑥직접민주제의 작동, ⑦자생적인 평판 체계. 아닌 게 아니라, '입말'을 통해 일상적 체험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와 예기치 않게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해 오는 카톡 메시지는 이웃집을 제집 드나들듯 하던 옛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포스트-국민국가 매체론'의 외양을 보이는 이러한 분석과 논의에는 함정이 있다. 이 논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상 '국민국가 매체론'의 심화 버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저자의 논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국가에서 마을로'라는 책의 제목에서 이미 잘 나타나 있다. 그가 '마을'을 단수로 보고 있다는 점, 나아가 '마을=국가'라는 등식을 처음부터 전

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저자가 설정하는 단수로서의 '마을'은 사실상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은유적 표현일 뿐이다. 그러한 의미의 '마을'은 종래의 '국가'보다 어쩌면 더 강한 구심력을 가진, 저자의 표현대로 '사생활이 부재한', 최악의 경우 파놉티콘의 디스토피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의는 현실의 일단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디지털매체는 한편으로 빅데이터를 소유한 중심 권력을 키우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방역 체계가 중시되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은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BTS의 글로벌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매체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국제적 문화장에서 기존의 균근했던 중심-주변의 구도가 약화될 만한 조짐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조차도 'K'라는 기호가 강조되는 국가주의적 의미로 수용될 뿐이다. 예컨대 광주의 음악계에서 디지털매체를 발판으로 전국적인 성공은 아니더라도 광주 지역 내에서도 지역민들과 일상화된 음악적 소통을 나누게 된 지역 음악가를 찾

기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디지털매체의 영향력과 관련한 포스트-국민국가 매체론은 '국가'가 아닌 '지역'의 눈으로 비판되고 새롭게 상상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수의 '마을' (국가)을 어떻게 복수의 '마을들' (지역들)로 상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있다.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선 불복'이 거론되는 미국의 정치적 혼란 양상이 말해 주듯, 기존의 국가 중심적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디지털매체를 타고 실시간으로 이합집산하는 여론의 속도를 정치적 대표자들이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포퓰리즘으로 재부상하게 될 정치가들이 선택할 길은 파시즘과 전체주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마을'이 아닌 '마을들'에 대한 상상은 이에 맞선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이어야 한다. 그것이 복수의 '마을들'이어야 하는 이유는 단수로서의 '마을'이라는 은유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로 회귀하거나 기껏해야 지역 이기주의적 상상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상호 존중과 다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복수의 '마을들'을 상상할 때에만 국가주의 이후의 지역적 삶의 정치를 살필 수 있다.

2040 광주도시계획 이렇게

시민 참여 확대로 시민이 만드는 도시계획을



윤희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으로 추정한다. 예전에 이경찬 교수의 글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오늘날 광주, 전주, 상주와 같은 도시들을 보면 유사한 가로망 패턴이 존재한다. 이 도시는 모두 통일 신라 시대 9주 5소경이었고, 우리 광주는 당시 무진주였다. 총장로와 금남로를 대상으로 고고학 조사를 하지 않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도시 공간 패턴이 천년이 지난 오늘날 원도심을 이루는 것을 보면, 한번 계획한 도로나 건축물이 공간에 구현되면 얼마나 긴 세월을 유지하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만큼 도시계획은 중요하다. 우리는 지방선거 때마다 4년간 광주시를 이끌 리더를 뽑으려고 심사숙고한다. 하지만 앞으로 천년을 넘게 광주의 공간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도시 기본계획은 그저 전문가, 공무원에만 의지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공동의 미래를 그리는 도시 기본계획 2040에 145만 광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제

까지 해보지 않아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참여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참여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판단되는 계층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20년 후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할 청소년이 적극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풍영정전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때 특이한 경험을 했다. 풍영정전 주변의 학교 학생들 7000여 명이 참여했다.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들의 경우 그림을 그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참여의 영역을 어른으로만 생각했던 필자의 무지를 반성할 시간이었다.

또 하나는 계획 수립에 이전 도시 기본 계획처럼 고작 100명이 참여하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들의 대표성도 문제이지만, 관심을 갖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 혹자는 요즘 말로 플랫폼이라 한다. 시민이 참여해도

시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공무원들이 계획의 초안을 만들면 웹 페이지를 통해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개인, 시민사회단체, 주민 조직 등 우리 광주를 이루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생각하는 의견을 모아 문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할 공간을 마련한다. 이렇게 수차례, 수십 차례 그 과정을 거쳐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장구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공청회 몇 번으로 끝낼 생각은 과거의 계획 수립에나 통용되었던 일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가 모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변을 기회로 삼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 도시에 사는 누구도 참여의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존중되는 도시 기본계획 2040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살고 일하며, 참여하는 도시'의 시대다. 이는 인권 도시 광주의 참모습을 보여 주고, 광주의 미래를 모두 함께 그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다.

기고



정상진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돌봄지원팀장
사회복지학 박사

위드 코로나(With Corona)와 긴급 돌봄 서비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라면서 '위드 코로나' (With Corona)를 선언하였다.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도 지난 8월 17일 광주시에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행정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모든 생활 영역에 있어서 코로나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외에도 미래에 다가올 유행성 바이러스에 좀 더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일 것이다.

코로나19의 대응행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고 사회 서비스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예로 돌봄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돌봄 서비스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는 대면 접촉을 통해 제공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데 이러한 특성은 비대면, 비접촉으로 대표되는 코로나19 방역 원칙에 배치된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었고 초유의 상황에 대비책을 마련하지도 못하여 대상자들이 방치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때문에 취약 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했고 '긴급 돌봄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긴급 돌봄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의 '위드 코로나' 버전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을 발족하고 제공 인력을 모집하여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요양보호사, 간병 유경험자, 보육교사 등 긴급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사람으로 사회서비스원 자체 인력 30명을 구성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비상시 가용 인력 70명 이상을 확보하여 모두 100명 이상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다.

서비스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노인·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서 지원, 식사 도움, 장보기 및 약품 대리 수령,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자 중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자

와 함께 격리 생활을 하면서 내부 생활을 지원하거나 장보기 등 외부 활동을 지원 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 유형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병원 생활 지원이다.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는 위험 수당 등의 산정을 통해 위험을 감수한 헌신에 합리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의 조직 구성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져 최근에는 실무 인력이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긴급 돌봄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실무 인력들의 마음은 급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민은 이전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준비 중인 긴급 돌봄 지원단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리라 믿는다. 광주시민과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라는 거친 파도를 큰 희생 없이 헤쳐 나가기를 소망한다.

社說

30년 숙원 전남권 의대 설립 포기할 수 없다

의료계 파업의 유단이 결국 전남권에 떨어지게 됐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 지역민들은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정부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못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전남의 의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러난 전문 의료 인력 부족, 수도권-비수도권 간 및 지역간 심각한 의료 격차 등을 감안한 의료 혁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록 전남 지사도 곧바로 낸 호소문을 통해 "지난 7월 정부여당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방역망 뒤흔드는 거짓 진술 엄히 다스려야

일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거짓 진술과 검사 거부가 광주 지역 방역망을 크게 흔들고 있다. 이들이 방역 당국의 통제를 무시하고 도심을 누비면서 '조용한 전파' 확산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8·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북구 양산동 거주 일가족 다섯 명은 집회 참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검사도 거부하다 지난달 29·30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집회 참가 직후 10여 일간 지역 내 교회 예배에 일곱 차례나 참석하고 고검정조사에서는 "가정 예배만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게다가 이들 일가족 중 A군은 지난달 22일 광주 모 고교에서 검정고시를 치른 것으로 확인돼 수험생과 감독관 179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앞서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는 광주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숨겼고,

사실 우리가 누차 지적해 왔지만 전남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이 때문에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 환경이 가장 뒤쳐진 지역이 됐다. 이는 각종 지표로 증명되는데 우선 의사 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전남은 1만 명당 의사 수가 25.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4명이 적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감안, 의사 정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높은 노인 인구 및 장애인 비율도 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전남 65세 인구는 23%로 전국 평균인 15.9%를 훨씬 웃돌고 장애인 인구 비율도 7.5%로 전국 평균 5%보다 높다.

따라서 전남권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앞으로는 정부·여당과 의협의 재논의 과정에 '전남권 의대 설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광주 252번은 서울 집회에 참석하고도 나주의 물놀이 시설에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방역 방해 행위가 역학조사 지연으로 이어져 산발적 집단 감염이 확대되고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속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두 사람의 이기적이고 분별없는 행위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급기야 광주시는 거짓 진술로 고발된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방역이 차질을 빚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의적인 방역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영국의 미래학자이자 철학자인 닉 보스트롬은 자신의 책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에 이르는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뇌를 철저히 모방해 지능적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내는 '전뇌 에뮬레이션' (whole brain emulation), 유전공학을 통한 '생물학적 뇌 기능 향상', 뇌에 칩을 이식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인터랙티브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네트워크와 조직의 '점진적 향상' 등이 그것이다.

초지능 시대

현재 일반 지능의 측 면에서 기계는 인간에 비해 훨씬 열등하다. 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기계가 초지능에 이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닉 보스트롬은 이들 몇 가지 방식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통해 초지능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지구촌에서는 이들 방식이 상당히 빨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뇌에 8mm짜리 컴퓨터 칩을 이식한 돼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역만장자 혁신가인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또

다른 도전'이라며 공개한 것이다. 이식된 칩에 입력된 자료에 따라 돼지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닉 보스트롬이 제시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돼지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머스크도 최근 "(칩 장착을 통해)얄츠하이머나 척추 손상 등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장착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두뇌에 전국 수천 개가 있는 무선장치를 이식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최고의 미래학자로 꼽히는 레이 커즈와일은 지난 2005년 발표한 '특이점이 오고 있다'라는 책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해 심오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적 특이점'이 오는 2045년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뇌에 칩을 심은' 사이보그 돼지(Cypork)가 이미 등장한 이상 초지능을 지닌 기계 또는 인간의 등장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온 지구촌이 이해집단의 갈등과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다가올 초지능 시대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